

## [ 종합·해설 ]

민주, 통합신당과 '소통합' 보류

# 범여권 '7월 대통합' 현실화 되나

박상천 대표-우리당 2차 탈당파 회동

'전주 논쟁' 이후 대통합 선회 움직임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의 백의종군 선언에 이어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합당을 연기하는 등 교차상태에 빠져있던 범여권 대통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소통합이 상당기간 보류되고 오는 15일 이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지면서 범여권 대통합이 급류를 타는 '7월 비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은 "더 많은 중도개혁세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신설 합당의 마지막 법적 절차인 '수입기구 간 합동회의'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15일께 신설 합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지난 12

일 오후 합당 일정 연기를 제안했고 김한길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근태 전 의장의 백의종군 영향으로 양측의 통합 전선에 근본적인 변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즉, 전체적인 정국의 흐름이 범여권 대통합으로 흘러면서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면서 소통합을 일

단 연기하고 대통합 방향으로 선회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실무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이에 소통합을 보류하면서 추후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중도개혁통합신당은 폐이파 당원을 제외하면 전체 당원은 국소수에 불과한 신설 정당이면서도 실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며 차라리 소통합을 보류하고 대통합에 나서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2일 오후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인 김부겸, 정장선 의원 등을 회동을 갖고 대통합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으며 양측 간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김효석, 이낙연, 신종식 의원 등 민주당 대통합과 협력 의원들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진 광주시당 위원장, 장성원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점차 대통합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전주에서 회동을 가진

후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의 합당작업 보류 ▲열린우리당 탈당파 세력의 창당구상 중단 ▲'중도개혁세력 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의 개최를 주장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민심 흐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중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당분간 열린우리당 2차 탈당과 추가 탈당과 의원들과의 물밀 조율에 나서면서 20일을 전후해 대통합을 선언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도개혁통합신당과의 합당 약속을 팽개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소통합을 보류하자는 명분 아래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며 "이럴 경우 다음달에 범여권 대통합이 이뤄지는 '7월 비행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참여정부 왜곡된 평가 바로 잡겠다"

참평포럼 광주·전남 창립대회

친노(親盧) 조직인 광주·전남 참여정부평가포럼(이하 참평포럼)은 13일 오후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참평포럼의 지방조직은 대전·충남과 경남에 이어 3번째다.

광주·전남 참평포럼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고자 결집했다"며 "2002년 국민참여의 주역들, 참여정부 정책담당자들, 시민사회·학계 인사들, 민주정부 10년의 장도를 걸어온 민주평화개혁세력들, 민주정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건강한 시민들이 함께 정당한 평가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평포럼은 또 "민주정부 10년의 여정 속에서 참여정부가 5년째 선진강국의 큰 바다로 전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라와 계례의 미래보다는 정권 수취만을 생각하는 수구보수세력들의 부당



광주·전남 참여정부평가포럼 창립대회가 13일 오후 전직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 공격과 횡포가 판을 치고, 이를 전파하는 보수언론의 작태는 금도를 넘어선지 오래됐다. 잘못된 정보와 굴절된 시각, 왜곡된 평가와 위장된 논리들이 칼날을 틀어대며 국민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참평포럼의 상임대표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공동대표는 이명자 광주시의원, 서대석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심우재 전 광주노사모 대표, 문태룡 전

참정연 전략기획위원장, 황세연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등 8명이 맡는다.

또 송기숙 전 문화중심도시조성위 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허성관 광주과기원장이 고문을 맡기로 했으며 고현석 전 곡성군수와 노영옥 전 광주약사회장 등 2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 후에는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완 참평포럼 대표가 '정치개혁의 성과'를 주제로 특강했다. 참평포럼은 또 이날 이 대표의 특강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초청, 5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지표로 보는 참여정부·균형발전 전략', '정치개혁의 과제', '동반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전략, 사회(교육·노동·복지) 정책', '한반도 평화번영 노선' 등을 주제로 시민정책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쌍용자동차 영업사원 모집

국내 최고수준의 자동차 선도 기업,

쌍용자동차가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자동차영업직 (신입 및 경력)	모집기간	•2007년 6월 11일(월)~6월 24일(일)
모집인원	000 명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온라인 지원)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근무장소	•전국 쌍용자동차 영업소 •본인 근무 회랑 영업소 우선 배치 (쌍용자동차의 전 영업소는 딜러체계로 운영)	접수처	•인터넷 접수 : www.smotor.com •우편 접수 :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53 쌍용자동차 인력지원센터
응시자격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고졸이상의 학력보유자 •전문대졸 및 대학졸업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6월 27일(수)] •신입입문교육[7월 2일(월)~6일(금) 예정]→영업소 배치[7월 7일(토)]
급여조건	•고정급 + 판매수수료 + 인센티브 •영업사원 평균연봉 3천만원 내외 (2006년 기준) •수습기간 ( 6개월 )동안 고정급 지급	기타사항	•온라인 접수자는 면접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하여 우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일정을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516-9600)로 연락바랍니다



해 기준재정수요액에 상당하는 보통교부세를 전액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전남지역 등 노인복지 수요 확대

13일 유선호 민주당 의원(장흥·영암)은 6월 13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고령화지역 및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

/이동욱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 중단 촉구 배경

## 인구·SOC·복지 양극화 '지방 죽이기' 더는 안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3일 이례적으로 중앙정부를 겨냥,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 폐기'를 촉구한 것은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전남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새로운 신도시가 양산되어 왔다. 이번에 발표된 동탄2지구 660만 평까지 포함하면 지난 19년간 무려 15개의 신도시가 탄생한 셈으로, 총 면적은 5천326만 평, 공급주택은 87만 호다.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면 350만 명이 신도시에 거주한다는 계산이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일자리로 부동산값이 급등한다. 이번 동탄 2지구만 보더라도 총 사업비는 14조 원대로, 토지보상비만 6조 원이다. 화성시의 공시지가는 지난 2001년 이래 350%나 올랐다. 반면 전남도의 땅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 지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인 잣대만 들어댄다면 계속 전남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난 1970년 전국 인구의 28.3%였던 수도권 인구가 2005년에는 48.2%로 2.5배가 늘었고, 오는 2030년에는 54.1%를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대로라면 지방의 땅값은 불보듯 명확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 1970년 이후 전국 인구는 57%가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50%가 줄었다.

사회간접자본이라 불리는 SOC도 문제다.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정부 자체 간접자본으로서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도 심각한 양극화가 생겨난 상태다. 특히 교육분야는 가장 극복하기 힘든 도·농간 격차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신도시가 집중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229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설립될 493개 초·중·고교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 10년간 전남의 학교는 폐교 등으로 인해 149개가 줄었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복지분야의 격차도 심각하다. 올해 전남의 복지예산은 지방세 총 수입의 무려 96.2%를 차지한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복지예산 총당하기에도 빠듯하다는 얘기다. 반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복지예산은 지방세 수입의 20.2%, 14.4%, 13.5%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이동욱기자 redplane@kwangju.co.kr